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25

JCCT 2023-11-4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관련 연구 경향 분석 및 제언

-1998년 ~ 2023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suggestion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NLL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1998 to 2023-

김현식*, 이정훈**

Hyeon-Sik Kim*, Jeong-Hoon Lee**

요약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NLL이남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가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국제정치환경의 이해관계 속에 향후 NLL의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주요어 : 북방한계선, NLL, 국제법, 연구경향

Abstract The dispute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has been sharply opposed since the U.N. commander set it in August 1953 with the aim of preventing accidental arme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In 2022,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North Korea made a missile provocation beyond the N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research on the NLL, which is under way by North Korea's actual provocation, has been conducted and to suggest a direction to proceed.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research using a total of five academic information DBs, including RISS and Scholar, focusing on academic papers studied on NLL from 1998 to 2023.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each year, field, and research metho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earch volume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 research field had the most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NLL and historical background, confirming the need to expand to more diverse fields to have international legal justification and justification for the NLL, considering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logic of power. In terms of final research methods, most of them were literature studies, so the need for quantitative research using interviews, surveys, and big data was also found.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setting the research direction for the international response of the NLL in the future amid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at is still ongoing.

Key words : Northern Limit Line, NLL, International Law, Research Trends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6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2, 2023

Accepted: November 6, 2023

**Corresponding Author:106rotcian@hanmail.net

Dept. of Psychology,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Korea

I. 서론

2022년 11월 2일 북한은 분단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실시하였다. NLL은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 UNC)측이 정전협정시 서해 해상분계선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1953년 8월 30일 UNC사령관 클락 대장이 남·북간 무력충돌의 방지를 위해 선포한 한국 측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는 선을 일컫는다[1]. 북한이 1984년부터 지금까지 2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러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직접 겨냥한 적은 처음이다보니 그의 미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NLL인근 수역은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의 군사도발의 목표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고 이번의 미사일 도발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최근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그 반대급부로 북중러의 공조 강화 움직임이 일어 신 냉전체제가 본격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에 대비하고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 논리를 정비해서

향후 분쟁이 도래할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NLL관련 연구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국제법적 정당성을 얻기위한 관련 연구는 지속되고 충분한지 그 연구의 경향성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본론

1. 관련연구

이에 본 연구는 표 1처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NLL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해당기간에 발표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성 관련 주제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그러나 NLL 연구의 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다른 주제를 다루더라도 연구 경향성을 분석한 논문을 추가로 탐색한 결과 NLL 연구경향성 분석에 용이한 연구설계를 한 논문 3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2, 3, 4].

표 1. 북방한계선(NLL) 관련 연구의 연도별 현황
Table 1. Annual Status of NLL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논문 수	0	0	0	0	3	0	1	2	1	0	1	0	3
비율(%)	(0%)	(0%)	(0%)	(0%)	(6.6%)	(0%)	(2.2%)	(4.4%)	(2.2%)	(0%)	(2.2%)	(0%)	(6.6%)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논문 수	2	6	6	1	1	1	1	2	4	0	3	7	0
비율(%)	(4.4%)	(13.3%)	(13.3%)	(2.2%)	(2.2%)	(2.2%)	(2.2%)	(4.4%)	(9%)	(0%)	(6.6%)	(1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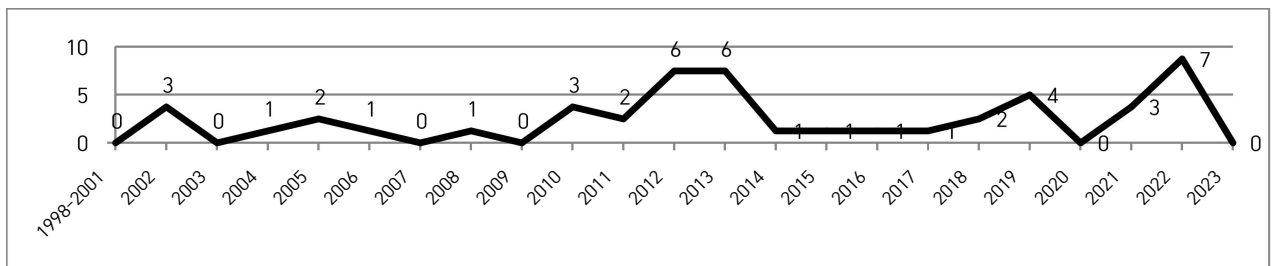


그림 1. 북방한계선 연구 1998-2023년까지 추이
Figure 1. The Trends of NLL from 1998 to 2023

그 중 ‘감정치유 연구동향분석’, ‘다문화 장병 정책 연구동향분석’이라는 두 편은 특정한 의미부여 없는 한정된 기간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데 그친데 반해, 연구자의 선행연구인 ‘대북 심리전 연구동향 분석’이라는 논문은 정부의 대북기조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 선정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포함하여 비교를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연구자는 세 번째 논문의 기간선정에 착안하여 진보 3개 정부와 보수 3개 정부를 포함한 199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로 선정하면서 정부 성격 및 대북 기조와 NLL의 연구동향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NLL관련 연구동향 파악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의 관련된 학술논문을 KISS, DBpia, RISS, 스크라, e-article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도별, 연구분야별, 연구방법별, 연구자별로 분석하였다. 계량적인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학술논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NLL’,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술논문을 우선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NLL’, ‘북방한계선’과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논문은 모두 포함하였다.

셋째,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법적검토, 정책제언, 군사분쟁, 정당성 등 NLL과 관련된 대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물로 한정하였다.

3. 분석결과

1) 연도별 현황

NLL연구 관련 학술논문들의 연도별 발행현황으로 표 1에서와 같이 199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4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NLL에 대한 연구는 정부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NLL 관련 도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보성향의 정권에서는 연구가 미미하게 이뤄졌지만 반대로 보수성향의 정권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보였다. 예를 들면, 표 2에서 보듯이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같은 해 9월 2일 북한

은 북한만의 일방적인 서해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29일에는 제2차 연평해전도 발발했지만 이 기간 NLL 관련 연구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연평해전이라는 대규모 도발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저조했던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진행되었는데 회담 간 북한은 지속적으로 서해 NLL 백지화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평화수역 설정 등을 주장해왔고[5], 2007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되어 NLL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해당기간 관련 논문은 이러한 화해협력분위기가 반영되지인지 단 4건에 불과했다[6, 7, 8, 9].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방한계선 관련 논문은 2012년, 2013년과 같이 특정년도에 집중되었다. 해당 기간은 이명박 정부 시기로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던 직후이다. 이후 정부는 2011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신설하여 서해에 병력 및 장비를 증강시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NLL 관련 연구는 12건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는 같은 도발에도 연구실적이 저조했던 진보성향의 정부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진보성향의 정부 시기로 8년 동안 NLL 관련 논문은 7건에 불과하여 연구가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달성이라는 정책기조가 NLL에 대한 당위성이나 명분 등의 연구에 대한 동력약화 등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성향의 정부 시기로 NLL 관련 논문은 21건으로 진보성향 정부 시기에 비해 3배 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데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 11건의 연구가 이뤄졌는데 NLL 평화와 관련된 논문이 주를 이뤘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6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침범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했다[10]. 9.19 군사합의에는 ‘서해 완충

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효력 정지 시 북한의 도발 명분에 힘이 실려 도발 가능성이 증대됨은 물론 기존 연구의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 보수성향 정부의 대북기조를 고려할 때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별 연구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NLL에 대해서 ‘NLL의 역사적 배경, 성격’, ‘법적검토’, ‘군사분쟁’, ‘정책제언’의 연구주제가 주를 이뤘다. 표 3은 NLL 관련 연도별 연구 주제 현황을 보여주는데 NLL의 역사적 배경, 성격 분야가 13건으로 전체 연구의 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2.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부별 연구현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Government-Related Research on NLL

구분	NLL 연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주요 이슈
김대중 정부(1998.2-2003.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6월 15일 서해교전(제1차 연평해전) • 1999년 9월 2일 북한만의 일방적인 서해상의 해상 군사분계선 선포 •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제2차 연평해전)
노무현 정부(2003.2-2008.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5월 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北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주장 • 2006년 3월 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北 서해 NLL 백지화 주장 • 2006~2007년 4차~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北 공동어로수역 설정 주장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서해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수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설정 제안
이명박 정부(2008.2-2013.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11월23일 연평도 북한의 포격도발 • 2011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신설, 서해 병력 및 장비 증강
박근혜 정부(2013.2-2017.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현 정부 당시 NLL 대화록 논란
문재인 정부(2017.5-2022.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9.19 군사합의
윤석열 정부(2022.5-현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9.19 군사합의 폐기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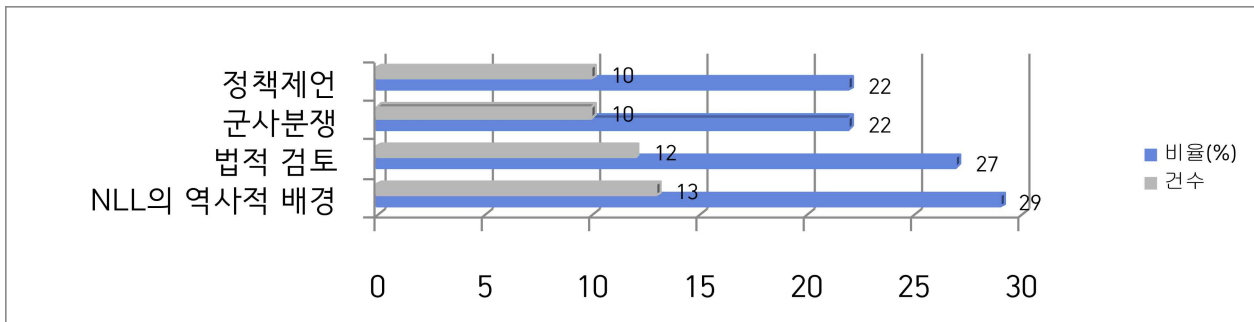


그림 2. 주제별 연구 현황 (건수, 비율%)
Figure 2. Current Status of Research by Subject (number of cases, ratio)

2) 연구분야별 현황

NLL 연구에 있어 역사적 배경, 성격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된 이유는 1953년 8월 30일 NLL을 선포한 시기, 즉 역사적 배경부터 논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법적 검토 분야가 많이 연구된 이유는 국제법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휴전선과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는 명확하게 규정되었지만 서해의 해안분계선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정전회담의 의제설정 당시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은 ‘제 1의제’에서 다루졌는데 해상분계선은 ‘제 3 의제’인 「휴전감시 방법 및 기수협상」에서 논의되었다. 그만큼 해상분계선은 정전회담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11].

표 3 북방한계선(NLL) 관련 연도별 연구 주제 현황
 Table 3. Current status of annual Research on NLL

연도/주제	법적검토	군사분쟁	정책제언	NLL의 역사적배경, 성격	합계
1998~2001					
2002	1	2			3
2003					
2004				1	1
2005	1		1		2
2006			1		1
2007					
2008	1				1
2009					
2010	2		1		3
2011	1			1	2
2012		2	2	2	6
2013	3		1	2	6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7				1	1
2018		1	1		2
2019	1	2		1	4
2020					
2021		2	1		3
2022	1		1	5	7
2023					
건수	12	10	10	13	45
비율(%)	27	22	22	29	100

이와같은 이유로 북한은 NLL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한 NLL의 정당성과 명분차원에서 국제법적인 근거제시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적검토 분야에 이어 군사분쟁, 정책제언이 각각 10건(22%)의 연구물이 있었다. 이는 1, 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뿐만 아니라 수백회가 넘는 북한의 경비정/어선의 NLL 침범 등이 군사분쟁에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수역 등의 고민이 정책제언 분야를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NLL 관련 연구가 미미하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로 도발이 과감해지며 더욱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NLL 관련 법적 검토, 군사분쟁, 정책제언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구가 연도별 1건씩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되지 않고 법적검토, 군사분쟁, 정책제언 등 고루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해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되었다. 9·19 군사합의에는 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화해협력의 남북기조가 반영되어서인지 NLL 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자 현황

NLL 관련 논문은 연구방법면에서 모두 문헌연구가 대부분으로 다소 편향된 연구방법이 진행되었다. 향후에는 국제법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 인터뷰,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 등 다양한 연구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5편 논문의 연구자들 이력을 살펴보면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NLL은 영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국방부가 주무 부서인데 군법무장교에 의한 연구는 전무하며 관련부서에 복무중인 군인에 의한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NLL은 국제법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므로 정부와 국방부는 국제법, 전쟁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작년인 2022년 11월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의 NLL 이남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NLL 도발은 미사일 뿐 아니라 연평해진, 대청해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꾸준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어왔다.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도발 행위의 동기중 하나는 NLL에 대한 법적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NLL의 국제법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북한이 설득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NLL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도 NLL의 정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결정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의 엄정한 대응에 대한 명분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NLL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고 신 냉전체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격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연구의 방향과 제언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연구 기간인 25년간으로 한정하더라도 연간 2건이 안되는 것은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되는 북한의 NLL 도발 위협으로 미루어볼때 연구의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45건의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NLL의 역사적 배경, 성격에 대한 연구주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적검토이나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법적검토 관련 연구는 단 3건[12, 13, 14] 뿐이어서 최신 국제정세와 국제법의 판례들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보수성향의 정부가 진보성향의 정부보다 연구산물이 많았다. 정부의 대북기조가 화해협력분위기 일 때는 연구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없는데 반해 보수성향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연구산물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넷째, 연구산물의 연구자중에 군법무장교나 관련 분야의 현역군인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NLL의 특성상 무력분쟁과 관련있는 국방부가 유관기관인 만큼 국제법, 전쟁법관련 법무장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 또한 문헌연구 뿐 아니라 국제법관련 전문가들의 면접, 설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다변화한다면 더욱 다양한 분석 결과는 물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국내연구물로만 한정하다 보니 해외의 다양한 국제법관련 연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해외 국제법 판례를 포함한 해외의 다양한 국제법 관련 연구를 기초로 우리 NLL의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References

- [1] M. J. Chung,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Northern", Journal of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pp.63-94, 2013
- [2] H. R. Park, "Analysis of Emotional Healing Research Trends-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05 to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vol.7. pp.223-229. August. 2021.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223>
- [3] S. J. Im and J. H. Lee, "Analysis of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Research Trends-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10 to 202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vol.8. pp.87-92. September.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87>
- [4] J. H. Lee, "Analysis of Reaserch Trends i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Focused on academic papaers from 2000 to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vol.9. pp.263-268. September.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223>
- [5] T. Y. Ha and Y. H. Kim and Y. C. Lee, "A Study on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and its Protection Scheme", Maritime Law Review, pp.29-70, 2013
- [6] J. H. Choi and Y. G. Kim, "Northern Limit Line and its Problems of the Law of the Sea

- in the Sea Area around Five South Korean Islands of the West Sea”, *Jour. Fish. Mar. Sci. Edu.*, 16(1), pp.110~123, 2004
- [7] S. J. Kim, “National Insecurity in the West Sea : Present and Problems”,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Vol.26. pp.287-321
- [8] S. H. Jhe, “Legal Validity of the Korean Northern Limit Line(NLL) and South Korea’s Possible Measures”, *CAU Law review*, Vol.7. pp.107-149, 2005
- [9] T. J. Kim, Dispute on NLL and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49, pp.175-204, 2006
- [10] Y. G. Chung, “Consideration of Suspension of Effect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Will it be expanded to the Pyongyang”, *The JoongAng*, 2023.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460>
- [11] D. Y. Yea, “The changes of North Korea’s awareness regar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near the maritime boundaries and the possibilitie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Vol.16. pp.91-113, 2022
- [12] T. S. Kim, “Analysis in issue of international law for Northern Limit Line”,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s and Science*, Vol.72. pp.75-104, 2016
- [13] H. Y. Yun, “The Legitimacy of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NEW ASIA*, Vol.26. pp.72-97, 2019
- [14] S. J. Oh, “A Study on the Legal Mechanisms concerning Management and Assistance for the 5 Islands in the West Sea”,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Vol.16. pp.27-50, 2022